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 본 키프로스 분쟁과 DMZ 문제*

김현정 동아대학교

논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키프로스 분쟁과 분리, UN 키프로스 완충지대 문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기존의 분단과 통일 관점에 대비한, 분리와 통합 관점, 키프로스의 분리 유형과 통합안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및 외부의 힘 그리고 DMZ와 관련된 정치·안보 및 사회·경제 상황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키프로스의 분리는 내부 이민족 간 갈등에 따른 내쟁형 갈등과 영국-그리스-터키가 매개된 국제형 갈등이 복합화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독립 이전은 물론 이후까지 영국의 간섭은 지속되었고, 키프로스 문제에 깊숙이 연계되었다. 키프로스 갈등이 격화되면서 1964년 UN안보리 186호 채택 후, 미국이 관련국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였다. 키프로스 사례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분리와 통합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분리의 역사성 그리고 통합의 당위성을 배제하고, 통합해야 할 목표를 경제적, 복리적, 안보적 이익에 목표를 두고 점진적 통합 방식에 관해 논의해 나아가는 과정에 관한 점진적 접근이라 하겠다.

주제어 : 키프로스, 유럽연합, 분단, 통일, 분리, 통합, 비무장지대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세계 유일 분단국(分斷國)’, 1953년 휴전 이래 분단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남·북한은 1990년 예멘 통일 그리고 이어 독일 통일이후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세계 도처에 분리된 국가들이 존재하며, 이들에게도 언론기사 등 다양한 문헌에서 ‘분단’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학에서 사용하는 ‘분단’은 어떠한 맥락에서 도출된 개념인가. 임채완(2006)은 분단을 근대 국민국가가 탄생한 이후에 나타난 정치현상이라 규정하고, 파운즈(Pounds)의 연구에 근거하여 분단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임채완 2006, 21-22). 그는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아일랜드, 폴란드, 네덜란드, 스웨덴과 노르웨이, 인도와 파키스탄, 독일 등을 비롯한 20여 개국의 분단 사례가 있다고 소개한다(김학노 2014, 14). 이러한 분단 사례를 고려할 때, 현재 남·북한만이 유일한 분단상태라고 지칭하는 것은 다분히 20세기 이데올로기, 냉전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인류의 오랜 역사가 전쟁과 분리, 통합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유독 냉전 시기만을 고려하여, 당시 강대국 논리에 의한 분할을 분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관련 연구와 정책에 있어 많은 제약 사항이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분리와 통합의 관점을 통해 이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이를 대비해 보는 시도가 진행 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유럽의 분단국 키프로스 분쟁과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문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기존의 분단과 통일 관점에 대비한, 분리와 통합 관점, 키프로스의 분리 유형과 통합안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및 외부의 힘 그리고 DMZ와 관련된 정치·안보 및 사회·경제 상황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의 사례인 키프로스의 분리 과정과 분리 이후 통합을

위한 외적·내적 힘의 관계를 통해 한반도 상황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분리와 통합, DMZ에 관한 선행연구

1. 분리와 통합에 관한 선행연구

최근 분단과 통일 문제를 분리와 통합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양한 사례의 분석을 통해 전개되어 왔다. 분리와 통합에 관한 연구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분단-통일과 대비한 분리-통합의 개념 고찰에 관한 글과 ② 분리 및 통합에 관한 정치사상적 개념 정리, 그리고 ③ 분리 혹은 통합의 사례를 통한 고찰로 나뉜다.

첫째, 분단-통일과 대비한 분리-통합의 개념 고찰에 관한 글은 기존의 분단국으로 인식된 사례에 대한 분리-통합의 접근 시각을 대치한다. 이호근(2020)은 독일 통일 전후 분리와 통합의 관점 적용을 제시하였다. 즉 그는 독일 통일 30주년을 맞아 전후 독일의 분단과 통일의 과정을 ‘분리와 통합’이라는 방법론에 의하여 전면 재구성한 것이다(이호근 2020, 111). 특히 해당 논문에서는 독일의 통합 과정을 단순히 정치적 단일체를 구성한 통일 체제에 집중하지 않고, 통합의 과정을 통일 완성 전후로 접근하는데 특징이 있다. 그는 국제관계에서 ‘하나의 완결된 통일적 단위’로서 ‘국가(state)’와 ‘국가(state)’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신현실주의적(neorealist) 분단과 통일의 관점과 달리, 분리와 통합의 접근이 갖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국가(state)-시민사회(social forces)-국제체제(international regime) (IP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간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동학과 그 내재적인 ‘과정’이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이호근 2020, 111).

둘째, 분리 및 통합에 관한 정치사상적 개념 정리에 관한 글로 우선 김학노(2018)는 분리-통합에 관한 개념 정립을 통해 홀로주체 및 서로

주체의 개념과 척도를 제시하였다. 그는 외연과 내포가 확대·심화되는 것이 통합, 축소·약화되는 것이 분리라 정의하고, 만남의 깊이와 방식에 따라 ‘홀로주체적’ 분리와 통합, ‘서로주체적’ 분리와 통합의 네 가지 이념형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학노 2018, 403). 다음으로 박정원(2018)은 특히 신생이론으로 분리통합이론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일방분리, 일방통합, 동등분리 그리고 동등통합의 네 개 유형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박정원(2018)은 해당 논문에서 유고슬라비아의 폭력적 분리 과정을 사례로 다루고 있기는 하나 해당 연구물에서는 분리통합이론을 정립하여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박정원(2018)은 20세기 사회주의 연방 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의 폭력적 해체 과정에 대해 분리·통합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는 사회주의 해체 과정에서 유고슬라비아가 폭력적 해체를 경험하는 바, 그 요인으로 연방국가 구성의 다양성을 말하는 배경조건과 티토시대 사회주의체제가 유지하였던 체제조건이 제기되지만, 이것들을 결정적으로 전쟁과 학살 및 인종청소로 연결시킨 것은 민족주의의 작동조건이었다고 기술하였다(박정원 2018, 131).

셋째, 분리 혹은 통합에 관한 선행 연구물 중 사례를 통한 고찰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우선 김인춘(2017)은 20세기, 핀란드에서 발생한 사회적 분리 현상과 정치적 통합 과정에 관해 분석하였다. 그는 20세기 초 심각한 내전과 전쟁을 겪으면서도 지속된 핀란드 민주주의는 계급통합과 사회통합을 이루고 언어분리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의 ‘민족’통합과 ‘핀란드 국민’ 형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김인춘 2017, 137). 또한 김종법(2019)은 이탈리아 정당 간 분리와 통합에 관해 고찰하였다. 그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이탈리아에서 부상하고 있는 신흥 정당인 오성당 및 북부동맹과 같은 신흥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초래하고 있는 정치질서 속에서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주의 등은 어떠한 정치적 상관성을 갖는가를 분석하였다(김종법 2019, 147). 또한 통일을 이룬 독일 사례에 관한 논문 또한 다수가 있다. 김현정(2020)은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 주민의 역할을 고찰하였으며, 김주삼(2020)은 독일 통일과 국내외적 환경요인에 관해 분석하였다. 김강녕(2020)은 동서독 정상회

담 분석을 통해 통독과정에서의 역할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정주신(2020; 2021)은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의 인과관계, 그리고 통일을 위한 DMZ 탄생의 역사적 난제와 해결방안을 고찰하였다.

이와 같이 분리와 통합의 시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임채완(2006)의 기존 연구에서 분단과 통일 유형을 제시한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다섯 개 사례의 분단과 통일 유형 비교

국 가 구 분	독일	예멘	베트남	중국과 대만	남북한
분할 원인	강대국 합의분할점 령	강대국 합의분할	강대국 합의분할	이데올로기 적 교착상태	강대국 합의분할점 령
분단 원인	강대국 미합의 (의견 불일치)	강대국 합의	내전	내전/혁명	강대국 미합의 (내부 불일치)
분단 유형	국제형	국제형	국제형/내 쟁형	내쟁형	국제형/내 쟁형
통일 요인	경제교류 (기능주의)	정치적 협상 (신기능주 의)	전쟁	-	-
통일 유형 (정책)	흡수통일	합의통일	흡수통일	중: 일국양제 대: 일국양구	남: 남북연합 북: 연방제

출처: (김학노 2014, 15; 임채완 2006, 29).

위 5개 분단 사례는 해당국 분리와 관련하여 강대국 논리에 의한 외력과 냉전적 메커니즘, 이데올로기적 갈등에 근거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의 분단 유형 분류에 관한 이견도 있으나, 중국과 대만을 제외한 4개의 경우 국제적 외력의 작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분리, 분단의 경우 안과 밖의 경계가 모호하고 안과 밖의

갈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나침의 일차적인 원인이 국내에 있는지(내쟁형) 아니면 국외에 있는지(국제형)에 따라서 분단민족과 분할국가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김학노 2014, 19). 이들이 통일을 이룬 요인과 과정 또한 사례별로 다양하다. 독일은 기능적 교류에 의한 일방의 흡수통일을 이루었으며, 1972년 전쟁에 의해 자유주의국가 북예멘과 사회주의 남예멘으로 분단되었던 예멘은 1990년 일련의 합의통일을 이루었으나, 1994년 남예멘이 연방을 탈퇴하는 등 다시 분열을 겪어왔다. 베트남의 경우 전쟁을 거쳐 통일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또한 후자는 분리와 분단의 차이점을 권력영합성(Zero Sum)의 유무로, 분할과 분단을 민족주의 성숙의 정도로 구분하는 의견도 있다.¹⁾ 즉 전자는 일정 영토 내 하나의 주권만을 인정하려는 권력영합성의 속성으로 정치공동체가 분단을 맞이했을 때 분리와 구분된다는 것이다. 후자는 공동체가 하나의 역사, 사회, 문화를 영위하다가 외부의 힘에 의해 분리되었을 때를 분할, 내력에 의해 분리되었을 때를 분단이라 칭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 또한 분단을 민족과 분리에 가해진 내적·외적 힘으로 구분하는 또 다른 의견에 불과하다.

분리와 분단의 구분과 비교는 통합과 통일의 비교에도 영향을 미친다. <표 2>는 통일과 통합의 개념을 비교한 내용이다.

<표 2> 기존 연구에서의 통일과 통합의 개념 비교

통일	통합
본래 하나였던 것이 나뉜 것을 합침	본래 다른 국가로 존재하는 것을 하나로 모음
폭력적 통일 가능	폭력 사용 배제
정치적 결합이 가장 중요한 잣대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부문별 통합 가능

1) Daily NK. “통일로 가는 길… ‘분단’의 의미를 바로 알아.” <https://www.dailynk.com/%ED%86%B5%EC%9D%BC%EB%A1%9C-%EA%B0%80%EB%8A%94-%EA%B8%B8-%EB%B6%84%EB%8B%A8%EC%9D%98-%EC%9D%98%EB%AF%B8%EB%A5%BC-%EB%B0%94%EB%A1%9C/> (검색일: 2021/08/01).

민족이 분석단위(또는 주체)	국가가 분석단위(또는 주체)
국가만이 통일의 객체(또는 대상)	다양한 하위체계/기능이 대상
다수의 국민 / 대중이 주도	소수의 엘리트가 주도
민족적 안락(comfort)이 목표	경제적, 복리적, 안보적 이익이 목표
감성적 열정의 문제	합리적 이익의 문제
주체가 적극적으로 환경을 변화	환경의 필요성에 주체가 적응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	과정 중시
총체적 접근	점진적 접근
통일 달성/실패의 진위 문제	통합의 '정도' 문제

출처: (김학노 2014, 340; 김혁 1997, 65-73).

분단과 분리의 구분 시와 마찬가지로 통일과 통합 또한 역사성, 당위성 등의 유무가 구분의 기준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통합은 특히 하나의 체제로 나아감의 과정을 중시하며, 사회 및 경제의 기능적 분기에 의한 점진적 접근에 주목한다. 통합 자체가 부문별 기능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통합 과정에서 폭력의 사용은 배제된다. 하지만 통일은 대다수 국민이 당위적으로 원하는 정치적 통합체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폭력적 방식이 취해지더라도 통일 달성을 위한 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분리와 통합의 관점이란 분리의 역사성 그리고 통합의 당위성을 배제하고, 통합해야 할 목표를 경제적, 복리적, 안보적 이익에 목표를 두고 점진적 통합 방식에 관해 논의해 나아가는 과정에 관한 점진적 접근이라 하겠다.

2. DMZ와 분리, 통합

DMZ는 전쟁이나 분쟁 상태 혹은 정전이나 휴전 상태에 있는 둘 이상 복수 국가 간 평화 조약 혹은 휴전 협정 등에 의해 설치된 군사 활동을 배제한 지역이다(Oren 2003, 7). 따라서 각각의 평화 조약이나 휴전 협정마다 DMZ의 길이나 폭이 다르며, 지역 내에서의 조건 또한 상이하다. 6.25 전쟁(한국전쟁) 정전협정에 표기된 DMZ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6.25 전쟁(한국전쟁) 정전협정 내 비무장지대

<p>제 1 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p> <p>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각 이(2)키로 미터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p> <p>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p> <p>3.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북 경계선 및 남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p> <p>제 2 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p> <p>가. 총칙</p> <p>13.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리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쌍방 사령관들은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십(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섬들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든 군사력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意的한 리유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리유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력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한 "연해섬"이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북위 37도 58분, 동경 124도40분), 대청도(북위 37도50분, 동경124도42분), 소청도(북위37도 46분, 동경124도46분), 연평도(북위 37도38분, 동경125도40분) 및 우도(북위37도 36분, 동경125도58분)의 도서군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하에 남겨 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섬들은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p>

출처: (김창환 2019, 22).

종래의 DMZ 개념은 중립지대의 개념과 달리 무력충돌 시 군사, 무력 활동이 금지되어 있지 않았으나, 제네바 협약 제1추가의정서 60조에 무력 충돌 시 특별한 보호를 받는 지대로서 DMZ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분쟁 당사국은 평시나 적대행위의 개시 후에 4조건(1. 모든 전투원과 이동식의 무기·군용설비의 철거, 2. 군용 고정시설의 사용금지, 3. 적대행위의 금지, 4. 군사노력의 활동종료)을 만족하는 지대를 비무장지대로서 설정하고 그것으로의 군사활동의 확대를 금지하는 합

의(명시적 합의에 의한다)를 체결할 수 있다.²⁾ DMZ의 비무장지대는 완충지대라고도 하며, 그 명칭에 관계없이 크게 다음 4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 그것은 비무장화, 일정한 완충적 공간의 존재, 군사력의 분리 또는 군대의 격리 배치, 감시기구의 설치 등이다.³⁾

세계 비무장지대는 ① 동부 에게해 제도(그리스어: Νησιά Αιγαίου, 터키어: Ege Adaları, 현재 그리스 북부 에게 주와 남부 에게 주 도데카니사 제도 일대), ② 올란드 제도(스웨덴어: Landskapet Åland, 발트 해 북부 보트니아 만 어귀 제도로서 핀란드의 자치령), ③ 남극, ④ 세우타 보더 펜스(Ceuta border fence) / 멜리야 보더 펜스(Melilla border fence), ⑤ 드네스트로 밸리 안전지대(Dniester Valley Security Zone), ⑥ 수단, ⑦ 그라운드 세이프티 존(Ground Safety Zone), ⑧ 한반도 비무장 지대, ⑨ 쿠웨이트-이라크 장벽, ⑩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⑪ 시나이 반도, ⑫ 스발바르 제도, ⑬ 유엔 키프로스 완충지대(United Nations Buffer Zone in Cyprus), ⑭ 유엔해방감시군(UNDOF: United Nations Disengagement Observer Force) 지역, ⑮ 이дли브 비무장지대(Idlib demilitarization agreement zone), ⑯ 시리아 북부(Northern Syria Buffer Zone)이 현존하고 있다. 이들 DMZ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국가, 정치공동체 간 분쟁 혹은 불법 이동 등을 막기 위한 목적과 하나의 공동체가 분리된 이후 정치통합체를 추구하는 가운데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경우이다.

키프로스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분리와 통합에 관점에서 키프로스 문제를 고찰하며, 유엔 키프로스 완충지대에 관한 정치·안보 및 사회·경제적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2) 21세기 정치학대사전. “비무장지대(국제법).”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2140&docId=727592&categoryId=42140> (검색일: 2021/08/01).

3) 비무장지대. “DMZ 개념.” https://dmz.gg.go.kr/gg_dmz-intro/boundary/boundary_01 (검색일: 2021/08/01).

Ⅲ. 키프로스 분리 과정 및 분리 유형

1. 키프로스 분리 과정

키프로스 공화국(Republic of Cyprus)은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섬으로 해양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다. 1960년 신생 키프로스 공화국이 성립될 때까지 키프로스는 미케네, 이집트, 페르시아, 비잔틴, 프랑크, 베네치아, 오스만 터키, 영국 등의 지배를 받았다(우덕찬 2003, 74).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영향력이 하락하자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키프로스에 대한 영국의 집착은 더 강해졌으며, 이에 따라 독립 이전인 1954년 그리스는 키프로스 문제를 UN에 상정하였다.⁴⁾ 당시 그리스계는 그리바스 장군을 주축으로 키프로스민족해방조직(EOKA: Ethniki Organosis Kyprion Agoniston)을 결성, 폭동을 일으킨 반면, 터키계 주민들은 영국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소수민족의 지위와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여겼고, 궁극적으로는 키프로스를 분할하자는 입장을 취했다(윤성원 2020, 5). 이에 그리스계는 영국측뿐 아니라 터키계에게도 테러를 이어나갔다. 당시의 터키국민들도 ‘분할 아니면 죽음(Ya taksim, Ya olum)’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터키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우덕찬 1986, 9-10). 연이은 회담의 결과, 그리스로의 ‘병합’이나 그리스계-터키계 ‘분할’의 형태가 아닌 완전한 독립 국가 수립의 방식으로 식민지 해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며, 키프로스는 마침내 1960년 8월 16일 독립 국가를 선포하게 되었다(우덕찬 2003, 75-76). 하지만 이와 동시에 1960년 8월 키프로스의 수도 니코시아에서 영국, 그리스, 터키 3국은 신생 독립국 키프로스에 대한 보장 조약(Treaty of Guarante)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키프로스 문제에 합

4) 차문석. “키프로스(Cyprus) 분단의 역사적 구조와 현재: 한반도 통일에 주는 성찰.” <https://uniedu.go.kr/uniedu/atchfile/down> (검색일: 2021/08/01).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았다(윤희두 2021, 130-131).

<표 4> 영국, 그리스, 터키의 키프로스 보장조약(Treaty of Guarante)

조항	내용
제1조	키프로스 공화국의 독립과 영토 보존, 그리고 안보를 보장한다. 다른 국가와의 합병 혹은 섬의 분할을 촉진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행위를 금지한다.
제2조	그리스, 영국, 터키 3국은 제1조에 명시된 약속을 기록하고 키프로스 공화국의 독립, 영토 보존, 안보를 보장한다. 그리스, 터키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키프로스와 다른 국가의 합병 또는 섬의 분할을 촉진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행위를 금지한다.
제4조	이 조약의 조항을 위반할 경우 그리스, 터키, 그리고 영국은 해당 조약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협의할 것을 약속한다. 공동의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세 보증국은 각각 조약에 의해 생성된 원칙을 재확인하기 위한 시도로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출처: (윤희두 2021, 131).

갈등을 봉합하지 않은 채, 신생 독립국이 된 키프로스는 1960년 8월 16일 ‘키프로스공화국 헌법’을 발효시켰다. 「취리히·런던조약」에 따른 두 민족의 ‘공동 자치통치체제’에 근거하여 그리스계와 터키계 주민의 인구를 고려한 권력 배분을 기초로 하고 있다(한명섭 2020, 48).

<표 5> 키프로스 건국헌법

조항	내용
제1조	키프로스는 대통령제 국가로 그리스계 공동체에 의해 선출된 그리스계 대통령과 터키계 공동체에 의해 선출된 터키계 부통령으로 구성된다.
제3조	공식 언어는 그리스어와 터키어이다. 법령과 행정문서는 두 공식 언어로 작성하며, 그리스계 또는 터키계에 해당하는 행정이나 기타 공식 문서는 그리스어 또는 터키어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그리스 공동체와 터키 공동체는 각각의 공휴일을 기념할 권리를 갖는다.
제46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행정권 보장을 위하여 7인의 그리스계 장관과 3인의 터키계 장관으로 구성된 각료위원회를 두며, 외교부, 국방부 및 재정부 중 하나의 부처는 터키계 장관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과 부통령이 합의하면 이 제도를 운번제로 대체할 수 있다.
제62조	임기 5년인 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의 의석도 그리스계 공동체에 의해 선출된 의원과 터키계 공동체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7:3으로 배분하였다.

제78조	의회의 법률과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단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지만 '선거법'의 변경, 당국 관련 법률 및 관세 또는 세금 부과 법률 채택을 위해서는 그리스계 공동체와 터키계 공동체에 의해 각각 선출된 의원의 출석의원 개별 단순 과반수의 찬성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제86조	이러한 의회와는 별도로 그리스계 공동체와 터키계 공동체는 각각의 공동체 의회를 구성
제87조	공동체 의회는 각각의 종교 관련 사안과 교육, 문화, 교습 관련 사안, 개인적 지위, 개인적 지위와 종교 사안 관련 민사 분쟁을 다루는 법원의 조정과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입법권을 갖는다.
제112조	공무원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은 공동으로 검찰총장과 검찰차장을 임명하는데 이들은 동일한 공동체 출신이 아니어야 한다.
제115/118/126조	감사원장과 감사원부원장, 중앙발행은행 총재와 부총재, 재무장관과 재무차관도 마찬가지이다
제123조	공공사업도 70퍼센트는 그리스계, 30퍼센트는 터키계로 구성되며,
제124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공동으로 위임한 의장과 9인으로 구성된 공공사업위원회도 7인은 그리스계, 3인은 터키계로 구성한다.
제129조	2000명의 군인은 그리스인 60퍼센트, 터키인 40퍼센트로 구성한다.
제133조	헌법재판소는 그리스인, 터키인, 중립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중립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제153조	대법원은 그리스인 재판관 2명, 터키인 재판관 1명, 중립 재판관 1명으로 구성하며 중립재판관은 대법원장으로 2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제173조	5개 주요 도시인 니코시아, 리마솔, 파마구스타, 라르나카, 파포스에는 터키계 주민으로 구성된 5개의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를 둔다.
제177조	이 지방자치단체들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합의로 결정된 권한 내에서 해당 관할권을 행사하며 기능을 수행한다.
제185조	키프로스의 영토는 하나로 불가분이며, 키프로스 내에 다른 국가와의 완전 또는 부분 통합과 자체 독립은 인정하지 않는다.

출처: (한명섭 2020, 48-50).

<표 5> 키프로스의 건국헌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은 신생 독립 당시부터 이질적인 집단 간 공존을 위해, 그리스계 대통령과 터키계 부통령으로 국가 원수가 구성(헌법 제1조)되도록 하였다. 행정권에서도 7인의 그리스계 장관, 3인의 터키계 장관(헌법 제46조)을 구성하도록 하고, 입법 또한 양측 각각의 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헌법 제86조). 이와 같이 키프로스는 영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국이 된 듯하였

지만, 영국군은 여전히 영토 내 주둔하였고, 그리스계와 터키계 간 갈등은 계속되었다. 1963년부터 정치권에서 다수를 점하던 그리스계가 그리스와 키프로스의 합병을 추진하고, 터키계와 권력배분 약속을 담은 헌법 13개 조항의 개정을 시도하면서부터 두 집단 간 갈등이 비롯되었다(조상현 2020a, 182).

이후 키프로스 분쟁은 키프로스 섬에서 그리스계 키프로스 주민(전체 주민의 78%)과 터키계 키프로스 주민(전체 주민의 18%) 사이에 국가권력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으로, 1974년에 터키군대가 키프로스의 북부 지역을 점령한 이후 남과 북 키프로스로 분단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⁵⁾ 언어는 그리스어, 터키어, 영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종교는 그리스교가 75%이고 이슬람교가 25% 정도를 차지하며, 이러한 민족 구성과 종교 구성은 결국 키프로스 분단에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⁶⁾

2. 키프로스 분리 유형

분리와 분단, 분할에 관하여 구분한 다양한 시각의 선행연구에서 이들을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외력(강대국 관련 국제형)과 내력(내부 분열) 그리고 민족주의의 작용이었다. 그렇다면 키프로스의 경우는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가. 키프로스 분리 유형 및 통합의 시도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973년 쿠데타로 집권한 그리스 군사정권은 마카리오스의 탈 그리스 정책 추구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집권 이후 국내정치의 불안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키프로스 문제를 당면 과제로 삼았다(우덕찬 2003, 80-81).

5) DMZ. “키프로스 분쟁.” https://www.dmz.go.kr/policy_data/down (검색일: 2021/08/01).

6) 차문석. “키프로스(Cyprus) 분단의 역사적 구조와 현재: 한반도 통일에 주는 성찰.” <https://uniedu.go.kr/uniedu/atchfile/down> (검색일: 2021/08/01).

<그림 1> 키프로스 위치 및 남북 분단 상황



(a) 키프로스 위치

(b) 남북 분단된 키프로스 및 UN 키프로스 완충지대

출처: DMZ. “키프로스 분쟁.” https://www.dmz.go.kr/policy_data/down (검색일: 2021/08/01).

키프로스의 그리스 통합을 우려한 터키는 그리스 정부에게 마카리오스 후임으로 새로 추대된 니코스 샘손(Nikos Sampson) 대통령을 사임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유사시 군사개입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취리히-런던 협정을 근거로 영국에게 군사개입을 요청하였지만 이마저 거절당했다(윤성원 2020, 7).

<표 6> 키프로스의 분리 유형

구분 \ 국가	키프로스	주요내용
분할 원인	내쟁, 강대국 합의분할점령	관련국: 영국, 그리스, 터키
분단 원인	강대국 미합의 (의견 불일치)	64년 UN안보리 개입 이후 미국-터키 의견 불일치
분단 유형	국제형/내쟁형	터키의 2차 침공 이후 그리스계 터키계 남북 분단
분단 이후 현황	교류	DMZ 왕래 및 거주, 관광

출처: 필자 구성.

키프로스의 분리는 내쟁형 갈등과 국제형 갈등이 복합화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독립 이전은 물론 이후까지 영국의 간섭은 지속되었고, 그리스계와 터키계 주민을 지원하며 그리스와 터키 또한 키프로스 문제에 깊숙이 연계되었다. 키프로스 갈등이 격화된 이후 1964년 UN안보리가 결의한 186호를 채택하여, 분쟁지역에 대한 UN평화유지군 창설과 중재자를 선정한 이후 미국은 영국, 그리스, 터키 및 키프로스와 의 평화적 회담을 촉구했다. 당시 설정된 평화지대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UN 키프로스 완충지대이다.

IV. 키프로스 내 DMZ 문제

1. UN 키프로스 완충지대 형성

키프로스 내전이 격화되자 UN안보리가 1964년 결의안 186호를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 내전은 계속되었다. 당시 미국 존슨(Lyndon Baines Johnson) 대통령은 볼(George Ball) 국무차관을 특사자격으로 영국과 터키를 잇는 서틀외교를 통해 키프로스 내전 종식을 촉구했다(Adams et al. 1968, 61-62). 하지만 갈등은 지속되어 그리스와 터키 관계는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인 그리스와 터키 두 국가가 전쟁을 펼치는 것은 공산권을 방어하고 있는 미국과 서유럽의 입장에서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후 미국이 중재하여 제네바 회담이 개최되었고, ‘애치슨 안(Acheson plan)’이 제시되었으나 근본적 해결은 없이 내전 종식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⁷⁾

7) 차문석. “키프로스(Cyprus) 분단의 역사적 구조와 현재: 한반도 통일에 주는 성찰.” <https://uniedu.go.kr/uniedu/atchfile/down> (검색일: 2021/08/01).

<표 7> 신생 독립국 키프로스의 1, 2차 위기

1/2차 위기	주요 내용
1차 위기 시 에치슨 안	- 카르파스(Karpas) 반도의 동북부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그리스로 병합 - 카르파스 반도의 동북부는 터키에 병합 혹은 터키계의 자치국 수립
2차 위기 시 터키 최후통첩	- 그리스계 국민국 해체 / 키프로스 밀입국한 그리스군(1천 2백 명) 본국소환 - 터키계 주민 지역의 자치행정권 부여 - UN 평화유지군 증설 - 터키계 주민 보상

출처: 차문석. “키프로스(Cyprus) 분단의 역사적 구조와 현재: 한반도 통일에 주는 성찰.” <https://uniedu.go.kr/uniedu/atchfile/down> (검색일: 2021/08/01).

그리스계 군인들이 키프로스를 그리스와 합병할 목적으로 일으킨 쿠데타를 계기로 터키는 터키계 주민 보호를 목적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전체 영토의 37%인 북쪽 영토를 점령하면서 분단이 시작되었다(조상현 2015, 43). 이후 양측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양측 간 직접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 왔으나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다. 1981년 ‘파판드로우’의 집권으로 그리스계가 그간의 직접협상을 무시하고, 키프로스 문제를 독자적으로 UN에 상정하자, 1983년 터키계는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The Turkish Republic of Northern Cyprus)을 선포하기에 이르렀고,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을 불법으로 인정하는 결의안 541호를 채택하였다(우덕찬 2003, 82). 남키프로스 입장에서 보는 북키프로스의 법적 지위나 북키프로스 주민들의 법적 지위는 남한 입장에서 보는 북한의 법적 지위 및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와 유사하다(한명섭 2020, 56).

<표 8> 키프로스 내 유엔 평화유지군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임무명칭	UNFICYP (United Nation Peacekeeping Force in Cyprus)
설치년도	1964년 3월 4일
임무	법과 질서회복 및 유지, 휴전기능 수행, 완충지대 형성, 완충지대 내

	민간인 영농보장 및 인도주의 활동, 휴전선 감시, 휴전위반사항 감시 및 보고
참가인원 / 참가국	약 6,000명 / 영국 등 11개국
설치근거	UNSCR 186호
재정지원	군대파견국과 키프로스 및 그리스정부 및 UN 기부금
당사자 / 원인	키프로스 내 그리스계(남), 터키계(북) / 민족, 종교, 분리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프로스 내에서 그리스 키프로스계와 터키계 키프로스 사회주의자 간의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창설됨(1963년 키프로스 요청) - 1974년 유엔평화유지군 임무 연장(그리스통합주의자 쿠데타와 키프로스 북부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투입된 터키군의 개입 이후) - 1974년 이후 휴전선 감시 / 완충지대 유지, 인도적 지원 실시 - 공식적인 휴전협정 없이 UNFICYP의 800명 이상의 군인과 60명 이상의 경찰병력이 매년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 - 1964년 이후 UNFICYP 임무수행 간 186명의 UN요원이 사망

출처: (조상현 2020b, 11).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키프로스 남북 간 완충지대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완충 지대('그린라인'이라고도 함)는 섬을 가로질러 약 180km에 걸쳐 존재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68호가 채택된 후 UNFICYP 군은 주둔군을 860명으로 줄이고 병력의 개입보다는 연락과 중재를 강조했다. UNFICYP는 휴전선과 완충지대를 감시하기 위해 정기적인 순찰과 함께 정적인 관측소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었다. UNFICYP 임무의 일부는 정당하고 지속적인 정치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전투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며 완충 지대를 따라 군대의 주둔을 축소하는 것이다.⁸⁾

키프로스는 폭력행위에 의해 남키프로스와 북키프로스로 분리되었으며, 분쟁 방지를 위해 <그림 1>과 같이 완충지대를 두고 있다. 완충지대는 4개 섹터로 나뉘어져 있으며, 영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 등 각각의 병력 기여국에 의해 관리되다가 1993년 이후 3개 영역으로 재편되었다.

8) UNFICYP. "Military in the Buffer Zone." http://www.unficy.org/nqcontent.cfm?a_id=1598&tt=graphic&lang=11 (검색일: 2021/08/04).

<표 9> UNFICYP 관리하는 키프로스 완충지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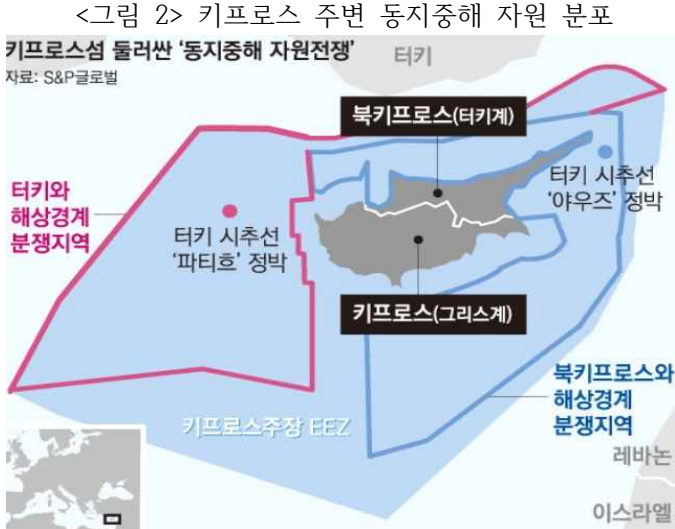
영역	주요 내용
섹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키나 마을(Kokkina exclave) ~ 니코시아(Nicosia) 서쪽 맘마리(Mammari) 마을 약 90km를 관리함. - 섹터 1 본부 및 사령부는 Skouriotissa 마을 근처에 있는 San Martin Camp에 위치함 - 아르헨티나의 주된 병력 기여
섹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년부터 설치됨. - 이 부대의 책임은 맘마리 마을 동쪽 끝 ~ 니코시아 동쪽 카이마클리 마을(village of Kaimakli) 완충지대를 따라 30km가 구간의 군사 활동을 순찰하고 감시 - 섹터 본부는 니코시아 구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베네치아 성벽의 서쪽 가장자리 근처 완충지대 내 울슬리 막사(Wolseley Barracks)에 위치함. - 영국군 병력 기여
섹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구역은 캐나다군이 1993년 철수할 때까지 순찰하다가 2구역과 4구역으로 흡수됨.
섹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imakli 마을의 동쪽 끝에서 시작하여 섬의 동쪽 해안에 있는 Dherinia 마을까지 65km에 걸쳐 군사활동을 순찰하고 모니터링함. Dekhelia 근처의 British Sovereign Base Area는 완충 지대의 두 지점인 Pyla 마을과 Strouvilia 마을 사이에 있으며 이 곳은 책임 외 지역임. - 섹터 본부는 Famagusta의 Camp General Stefanik에 위치함 - 한 소대는 Athienou에 본부를 두고 섹터의 서쪽 절반을 담당. 두 번째 소대는 Dherinia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버려진 마을인 Varosha를 포함하여 동쪽 절반을 책임짐. 세 번째 소대는 Pyla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완충 지대 안에 있는 유일한 이중 공동체 마을에서 군사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임무를 맡음. -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파견단 병력 기여

출처: UNFICYP. "Sector." http://www.unficy.org/nqcontent.cfm?a_id=1367&tt=graphic&lang=11 (검색일: 2021. 8. 4).

2. 키프로스 내 DMZ 현황

UNFICYP는 키프로스 내 DMZ가 정상 상태로의 복귀될 수 있도록 완충 지대의 많은 부분이 경작되거나 사람이 거주하게 되었다. 현재 완충지대 내 여러 마을 또는 특수 지역(토목 사용 지역)에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 혹은 노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인은 이 지역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



출처: 경향신문. “지중해 '분단의 섬' 키프로스는 지금 '자원전쟁' 중.” <https://news.v.daum.net/v/20190716215908045> (검색일: 2021/08/01).

완충 지대 내에서 민간인이 이동이나 활동을 하려면 UNFICYP의 특정 승인이 필요하다. 완충 지대의 동쪽 지역에 위치한 Pyla는 그리스계 키프로스인과 터키계 키프로스인이 나란히 거주하는 유일한 마을이기도 하다.⁹⁾ 2003년 4월 이후 북부와 남부 간 여러 교차 지점이 설치되었다. Pergamos와 Strovilia의 British Sovereign Base Area에 2개, Ayios Demetios/Metehan, Ledra Palace 및 Ledra Street에 있는 Nicosia에 3개, Nicosia 서쪽에 1개 Troodos 산맥을 향해 Astromeritis/Zodhia에서 그리고 섬의 서쪽 끝에 Pyrgos Limnitis/Yesilirmak이 설치되었으며, 2018년 11월 12일 8년 만에 처음으로 동부 Dherynia 교차점과 Lefka/Aplici 두 개의 추가 교차점이 동시에 열렸다.¹⁰⁾

9) UNFICYP. “About the Buffer Zone.” <https://unficy.unmissions.org/about-buffer-zone> (검색일: 2021/08/04).

10) UNFICYP. “About the Buffer Zone.” <https://unficy.unmissions.org/about-buffe>

내전 당시 완충지대를 포함한 인근 지역은 40여 년 동안 인적이 끊어진 채 폐허와 같이 남겨져 있었으나, 현재는 여권 혹은 신분증만 있으면 남북 주민이 자유롭게 국경 교차 지점을 지날 수 있다. 주민 이외 관광객들 또한 마찬가지다. 키프로스는 2004년 EU에 가입한 회원국이기 때문에 실제 EU 시민권자의 자유 왕래가 가능한 것이다.

최근 키프로스는 관광 및 자원개발 문제로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20년 11월 유령도시로 남아있던 바로시아(북 키프로스)에 일일 관광이 허용되면서 시작되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에르신 타타르 북키프로스 대통령은 2021년 7월 20일 키프로스 동부 해안도시 바로시아 내 3.5km² 구역을 군 통제구역서 제외하고 민간에 이양한다고 발표하였다.¹¹⁾ 이에 남키프로스는 물론 미국과 영국은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하였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021년 7월 20일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이 자칭 선포한 키프로스 분단 수도 니코시아 북부를 방문해 터키 군대 퍼레이드 사열을 받는 행사에서 “반세기 동안의 유엔 노력이 실패했다”라며 “두 민족과 두 국가가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선언했다.¹²⁾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키프로스 대통령은 바로시아 민간 이양을 “용납할 수 없는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소유자 권리가 문제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수용해 바로시아를 유엔에 넘기면 된다”라고 말했다.¹³⁾

<그림 2>에서와 같이, 키프로스와 터키-북키프로스는 동지중해 해상 경계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2020년부터 연안 해역에서 대규모 가스전이 잇따라 발견되며 갈등은 증폭되었다. 가장 큰 규모의 가스

r-zone (검색일: 2021/08/04).

11) 연합뉴스. “터키, 북키프로스 유령도시 재개방에 미·유럽 반발.”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1127800009?input=1179m> (검색일: 2021/08/04).

12) News Vision. “유엔 안보리, 키프로스에 대한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 규탄.” <http://www.nvp.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50> (검색일: 2021/08/04).

13) 연합뉴스. “터키, 북키프로스 유령도시 재개방에 미·유럽 반발.”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1127800009?input=1179m> (검색일: 2021/08/04).

전은 지난 3월 미국 엑손모빌이 키프로스 남쪽 해상에서 발견한 것으로, 300억 달러(약 35조원) 가치에 섬 전체가 200년간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다.¹⁴⁾ 이와 같이 자원개발, 관광의 가치를 두고 남북 키프로스는 더욱 갈등을 빚고 있다. DMZ 문제는 통합의 진전이 있거나, 자유 왕래 등 협력의 정도가 높아지더라도 또 하나의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DMZ의 존재가 양 측 간 통합에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향후 전망 및 시사점

본 논문에서는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키프로스 분쟁과 분리, UN 키프로스 완충지대 문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기존의 분단과 통일 관점에 대비한, 분리와 통합 관점, 키프로스의 분리 유형과 통합 안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및 외부의 힘 그리고 DMZ와 관련된 정치·안보 및 사회·경제 상황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의 사례인 키프로스의 분리 과정과 분리 이후 통합을 위한 외적·내적 힘의 관계를 통해 한반도 상황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키프로스의 분리는 내부 이민족 간 갈등에 따른 내쟁형 갈등과 영국-그리스-터키가 매개된 국제형 갈등이 복합화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독립 이전은 물론 이후까지 영국의 간섭은 지속되었고, 키프로스 문제에 깊숙이 연계되었다. 키프로스 갈등이 격화된 이후 1964년 UN안보리 186호 채택 후, 미국이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였다. 분리와 통합의 관점이란 분리의 역사성 그리고 통합의 당위성을 배제하고, 통합해야 할 목표를 경제적, 복리적, 안보적 이익에 목표를 두고 점진적 통합 방식에 관해 논의해 나아가는 과정에 관한 점진적 접근이라 하겠다. 키프로스 분리 유형 및

14) 경향신문. “지중해 '분단의 섬' 키프로스는 지금 '자원전쟁' 중.” <https://news.v.daum.net/v/20190716215908045> (검색일: 2021/08/01).

84 한국과 국제사회 제5권 5호 (2021)

통합의 시도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DMZ 문제는 통합의 진전이 있거나, 자유 왕래 등 협력의 정도가 높아지더라도 또 하나의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DMZ의 존재가 양 측 간 통합에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강녕. 2020. “동서독 정상회담 : 통독과정에서의 역할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6호, 203-244.
- 김인춘. 2017. “20세기 핀란드의 사회적 분리와 정치적 통합: ‘사회적인 것’의 민주주의적 구성과 ‘정치계획’.”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20호, 137-180.
- 김종법. 2019.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정당을 통해 본 분리와 통합의 딜레마.” 『유럽연구』 제37권 제2호, 147-171.
- 김주삼. 2020. “독일 통일과 국내외적 환경요인.”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6호, 117-144.
- 김창환. 2019. “비무장지대 및 군사분계선의 길이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지』 제22권 제1호, 19-27.
- 김학노. 2018. “분리-통합 및 홀로주체-서로주체의 개념과 척도.” 『한국정치연구』 제27권 제1호, 403-435.
- 김현정. 2020. “독일통일, 동·서독 주민의 정체성 형성과 게마인샤프트 복원.”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6호, 181-202.
- 박정원. 2018.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의 폭력적 붕괴에 대한 분리통합론적 접근.”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6권 3호, 131-157.
- 우덕찬. 2003. “키프로스 문제의 歷史的 背景과 經過.” 『중앙아시아연구』 제8호, 4-88.
- 우덕찬. 1986. “싸이프러스문제와 토이기의 대미소관계(1964-1974).”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성원. 2020. “지중해의 유로메나, 키프로스: : 분단문제 및 EU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통합유럽연구』 제11권 제2호, 1-26.
- 윤희두. 2021. “키프로스 분쟁과 그리스의 EC 가입 관계 연구 (1974-1981): 그리스의 국제 안보전략을 중심으로.” 『EU연구』 제58호, 123-152.
- 이호근. 2020. “독일 통일 30주년과 분리통합에 대한 연구: 독일의 전후 ‘분리와 통합’의 동학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32권 제3호,

111-157.

임채완. 2006. 『분단과 통합: 외국의 경험적 사례와 남북한』. 파주: 한울 아카데미.

정주신. 2020.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의 인과관계.”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6호, 145-180.

정주신. 2021. “DMZ 탄생의 역사적 난제와 해결방안.” 『한국과 국제사회』 제5권 5호, 31-62.

조상현. 2020a. “적대국가 간 초기단계 신뢰회복에 관한 연구: 키프로스의 통일협상과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총』 제9권 제2호, 179-205.

조상현. 2020b. “사이프러스 평화프로세스의 시사점: 통일협상과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2020 DMZ 평화포럼: 한반도 평화경제와 남북 인간안보 협력』 2020. 9. 18, 8-33.

조상현. 2015. “그리스·터키 숙적의 무대 키프로스 분쟁.” 『통일한국』 제6호, 42-43.

Adams, Thomas W. and Alvin J. Cottrell. 1968. *Cyprus between East and West*. Johns Hopkins Press.

Oren, Michael B. and Robert Whitfield. 2003. *Six Days of War: June 1967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Middle East*. Presidio Press.

경향신문. “지중해 '분단의 섬' 키프로스는 지금 '자원전쟁' 중.” <https://news.v.daum.net/v/20190716215908045> (검색일: 2021/08/1).

비무장지대. “DMZ 개념.” https://dmz.gg.go.kr/gg_dmz-intro/boundary/boundary_01 (검색일: 2021/08/01).

연합뉴스. “터키, 북키프로스 유령도시 재개방에 미·유럽 반발.”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1127800009?input=1179m> (검색일: 2021/08/04).

차문석. “키프로스(Cyprus) 분단의 역사적 구조와 현재: 한반도 통일에 주는 성찰.” <https://uniedu.go.kr/uniedu/atcfile/down> (검색일:

2021/08/01).

21세기 정치학대사전. “비무장지대(국제법).”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2140&docId=727592&categoryId=42140> (검색일: 2021/08/01).

Daily NK. “통일로 가는 길… ‘분단’의 의미를 바로 알자.” <https://www.dailynk.com/%ED%86%B5%EC%9D%BC%EB%A1%9C-%EA%B0%80%EB%8A%94-%EA%B8%B8-%EB%B6%84%EB%8B%A8%EC%9D%98-%EC%9D%98%EB%AF%B8%EB%A5%BC-%EB%B0%94%EB%A1%9C/> (검색일: 2021/08/01).

DMZ. “키프로스 분쟁.” https://www.dmz.go.kr/policy_data/down (검색일: 2021/08/01).

News Vision. “유엔 안보리, 키프로스에 대한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 규탄.” <http://www.nvp.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50> (검색일: 2021/08/04).

UNFICYP. “About the Buffer Zone.” <https://unficy.org/unmissions.org/about-buffer-zone> (검색일: 2021/08/04).

UNFICYP. “Military in the Buffer Zone.” http://www.unficy.org/nqcontent.cfm?a_id=1598&tt=graphic&lang=11 (검색일: 2021/08/04).

투고일 : 2021년 9월 15일 . 심사일 : 2021년 9월 24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0월 1일

* 김현정은 동아대학교에서 국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대표 논문으로는 “유럽안보에 대한 중국 위협 요인과 유럽의 대응”, “유로존 위기를 통해 본 이중 속도 유럽에 관한 논의: 비셰그라드 그룹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관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및 유럽지역연구다.

<Abstract>

Cyprus conflict and DMZ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division and reunion

KIM, HyunJung
(Dong-A University)

In this paper, the Cyprus conflict and the United Nations Buffer Zone in Cyprus a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division and reunion. In particular, this paper analyzed the division and reunion perspectives, types of separation, internal and external forces exerted on the divided countries, and the political, security,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related to the DMZ in preparation for the existing perspectives of division and unification. In the division of Cyprus, internal conflict and international conflicts mediated by Britain-Greece-Turkey acted as a complex cause. As the conflict in Cyprus intensified, UN Security Council No. 186 was adopted in 1964, after which the United States urged the concerned countries for a peaceful resolution. The case of Cyprus can provide a perspective of division and reunion. This is a gradual approach to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gradual reunion method, excluding the historicity of division and the necessity of reunion, and setting the goals to be integrated in economic, welfare, and security interests.

Keywords : Cyplus, European Union, division, reunion, DMZ
(Demilitarized Zone)